

태양광으로 돈벌이...에너지 공기관 ‘비리세트’

한전 등 수백명 적발...썩썩미 계약·가짜서류·뒷돈

감사원 “신재생사업 비리세트” 지적

감사원이 지난 4개월간 적발해 낸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사례를 보면 복대천이었다. 전·현직 공직자와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벌인 사실상 ‘비리 종합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고위공직자가 겸직허가 없이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하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부산시 부부 공무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결탁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전문브로커를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수 억여원

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전·현직 공직자들 이권 결탁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 겸 윤리위원장이던 A씨는 본인 명의의 태양광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를 직접 찾아 계약을 체결했다. 겸직허가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매출액만 2억7000여만 원에 이른다.

특히 자녀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는 자녀 취업 등으로 농업인 자격을 상실해 한국형 FIT 계약해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 없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 A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같은 기관 소속인 부장 B씨는 본인이 직접 설비 확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소유한 태양광발전소를 6억여 원에 매입하면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로 양수한 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억2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부산시 부부 공무원인 C씨와 D씨 및 수자원공사 직원 E씨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전문브로커와 접촉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전문브로커가 허위로 작성해준 농업경영체등록으로 한국형 FIT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력공사 소속 대리는 자신의 아버지와 배우자 명의를 차용해 태양광발전소 2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 배우자 명의 발전소가 감사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아 아버

지 명의로 양도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또다시 본인이 직접 양수받아 총 1억30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다 적발됐다.

◇교수가 허위 사업권 따내 되팔아 국립대 F교수는 허위로 신재생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팔았다가 탈미가 잡히기도 했다.

F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인 회사 G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그 해 12월 허위 주주명부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새만금 풍력사업 허가를 따냈다.

이후 2021년 12월 또 다시 허위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G사와 친인척 지분 84%를 가진 H사를 양도하는 인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이듬해 6월 태국계 기업에 5000만 달러를 받고 매각했다. 이는 최초 출자금의 약 600배에 달했다. /뉴스

“전남 서남권 발전 위해 광주 민간·군공항 조속 매듭지어야”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서남권 미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전남의 미래 비전과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개항했지만 현재 이용률 전국 최하위 공항으로 전락해 그 위상이 실추됐다”고 했다.

전남도협의회는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남도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 캠페인과 도민 강연회 등을 펼치고 있는 만큼 무안군도 맹목적인 반대를 중단하고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은 전남도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고 전남도, 군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상운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장은 “전남 도민 모두의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도민 화합, 전남 미래 발전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원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전남 발전과 건전한 사회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운동단체 중 하나다.

진보당 광주 총선 후보자들 “광주은행은 금리 인하를”

진보당 광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14일 “광주은행은 대출금리를 내리고, 초과이익은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15개 지방은행 중 최고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자들은 또 “광주은행은 지난해 이자이익 7702억 원, 순이익 2547억 원에 이어 올해 9월까지 2151억 원으로 전년보다 5.6% 상승했는데, 순이익 중 1776억 원이 주식배당금으로 쏘여 역외자금으로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다”며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기재부에 국비 지원 요청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록 지사와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2024년 국회 증액 핵심사업들이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국비 9조’ 예산 시대 개척 연일 강행군

국회 이어 기재부 방문 핵심사업 예산반영 건의

김영록 지사가 2024년 국비 9조원 예산 시대 첫 달성을 위해 연일 강행군을 거듭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국회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1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간담회를 하고 핵심사업 추진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기재부 예산실·국장과 간담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년보다 4.9% 증가한 8조 60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도 전남 대도약의 발판 마련에 필요한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증액 반영되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남의 현안 사업 필요성에 대해 충

분히 공감한다”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잘 검토해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이날 국회 증액 핵심사업으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 기획·조사 용역’(총사업비 2조 6000억원·2024년 10억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는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진행될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포함시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예산 반영

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광주~전남 상생 사업인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총사업비 미정·2024년 10억원)도 요청했다.

기존 오송,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

지와 차별성을 확보해 내년 하반기

에 있을 보건복지부의 ‘제5차 첨단 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사업비 1001억원·2024년 20억원)도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 7월 기재부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설립을 위해 총사업비 확정과 함께 부지 매입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기에 전남이 향토음식의 본고장으로서 향토음식의 체계적 발굴·보존과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총사업비 150억원·2024년 5억5000만원)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2024년 정부안 167억원 대비 127억원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 호 기자

“전문가지만 봉사 아쉽다”...전남신보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

전남도의회, 이강근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전남도의회가 14일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업무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33년간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직한 이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공헌이나 봉사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

류기준 의원(화순2)은 “이 후보자가 신용보증기금에서 33년간 재직해 전문성은 검증 됐을 것”이라며 “하지

만 대표가 되는 것은 전문성 외에도 다양한 사회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업자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측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 정치자금 기부와 종교단체 기부 등 대부분 연말정산용이고 실제 사회 기부는 없다”며 “이 정도면 어떻게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겠나. 전문가이지만 지역이나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후보자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포 편입, 지방 죽이기·선거용 속임수”

광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시장과 국밥 회동



김동연 경기도지사 14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김포시 서울 편입은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 서구 양동시장 한 분식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김포시 편입 정책은 지방축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자치 측면에서 다른 광역자치 단체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며 “강 시장과 그런 문제를 나누면서 대한민국의 앞길, 지방을 살리는 길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려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도 “김포 서울 편입으로 시작된 지방 메가시티와 균형 발전 문제를 어떻게 잘 하나갈 것 인가에

대해 김 도지사에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와 강 시장이 이날 오전 조찬 회동을 한 장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았던 음식점이다.

조찬 회동을 마친 강 시장은 시장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 서울 편입,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도 아니고 서울 행정구역의 확장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 누구나 같은 의견이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 플랜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에 의해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 김포 서울 편입처럼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즉흥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정치 쇼”라고 주장했다.

/조일상 기자

“물품 비리의혹 클린신고센터·의회공동조사”

김대중 교육감 “관리자, 학교 물품선정위 참여제한 필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학교 전광판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물품선정위원회 역할 재정립, 클린신고센터 설치, 의회와 공동조사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광판·소방장비 설치 등 학교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일을 과점하는 것이 있는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교육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의회의 승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 물품 선정은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예전 교육청이 주관했을 때는 학교 현실이 반

영되지 않고 공정성 문제가 있었지만 학교로 주체로 바꾸니 또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교장 등 관리자가 물품선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TF를 구성하고 클린신고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입수된 사안은 의회에 보고하고 공동조사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물품선정위원회 역할 재정립” 등을 약속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의 공직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찾아다니며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구축될 클린신고센터에 주저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호 기자

“광주 시립발레단, 공연 몰아주기·과다 보상 의혹”

심창욱 광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광주 시립발레단이 공연 몰아주기

기와 과다 보상 의혹에 휩싸였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심창욱(민주당·북구5) 의원은 전남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발레단이 특수관계인과 수 차례 공연하는가 하면 일부 공연 보상금도 지나치게 많이 지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여러 논란을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광주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발레단은 최근 단장과 사직 특수관계에 있는 모 오케스트라 A단장과 지휘자 B씨와 수 차례 계약해 협연을 진행했다. A단장은 발레단 단장과 광주모 기초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친분을 쌓았고, B씨는 A단장의 친필로 알려졌다.

시립발레단은 지난해와 올해 10월 정기공연을 포함해 4~5차례의

공연을 해당 오케스트라, 지휘자 B씨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 의원은 또 “발레단이 안무가 C씨에게 통상의 범위를 크게 웃도는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과다보상 논란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오케스트라는 공모 없이 선정하고, 안무가 역시 눈에 띄는 경력이 많지 않았음에도 거액을 지급했으며 비상임 발레단원을 공채가 아닌 단장 추천으로 채용하는 등 운영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많아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 문화체육실과 광주군에 회관 측은 “발레단 비상임단원 채용은 설치조례에 따라 채용이 가능하고, 예술단체에서 공연 협연자 섭외를 할 경우 예술감독과 부감독, 운영실장이 협의해서 적합한 협연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보상금도 지급규정 범위 내에서 정상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김도기 기자